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체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I. 중간선거 결과 요약	1
II. 주요 경제 · 통상 이슈별 입법 방향 전망	2
III.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결과 분석	12
IV. 국내업계 시사점	14

요 약

※ **조사방법** : 미국 소재 8개 무역관이 관할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정계, 업계, 학계 등)를 직접 인터뷰한 결과와 현지 개최 설명회 참관 내용을 토대로 분석

□ 무역촉진권한(TPA) 부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가속도 기대

-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있어 TPA 부활에 청신호
 - ※ TPA는 무역 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하여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의회는 투표를 통해 협상 결과의 승인 여부만을 결정 (2007년 만료, 민주당 반대로 부활 시도 무산)
- TPA 부활로 오바마행정부가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해 온 TPP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보호무역조치 기세는 수그러들 전망

- 지난 8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청원으로 미 상무부는 예비 판정을 뒤엎고,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 통상 전문가들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은 관련 움직임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

□ 예산안 협상에서는 치열한 공방 예고, 오바마케어·탄소배출감축법안 쟁점화 예상

- 내년 예산안 협상에 있어서도 공화당이 우위를 확보
 - 예산안은 여타 법안과는 달리, 소수파의 의사처리 방해가 불가능하고 상하원에서 단순 다수결로 통과 가능
- 차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확실히 되는 미치 맥코넬 켄터키 주 의원은 일찌감치 “예산안은 우리가 쥐고 있다”며 “건강보험, 탄소배출감축안 등 모든 사항을 내걸 것”이라고 엄포, 치열한 협상에 돌입할 것을 예고
 - 내년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부채한도증액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 다만, 지난해 연방정부 폐쇄 역풍을 경험한 공화당이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평가

□ 에너지 정책 변화로 국내업체에도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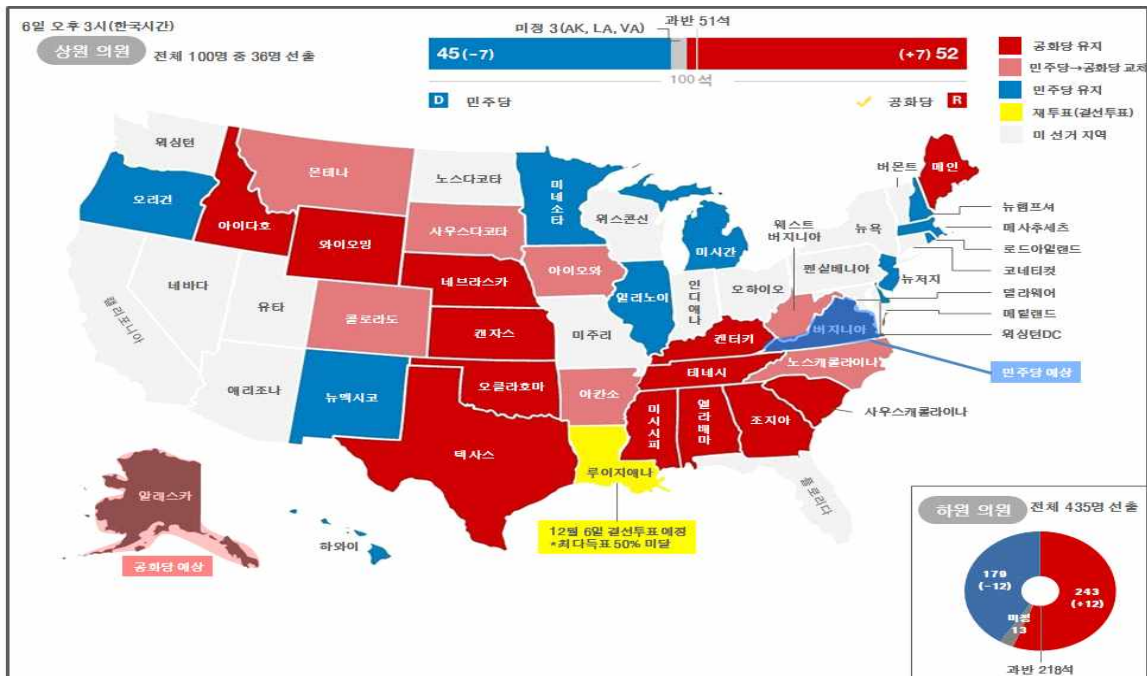
- 공화당 양원 집권으로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
 - 미국 석유기업들은 40년 묵은 원유 수출 금지 조치(EPCA)를 풀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비전 개진
 - 랜드 폴(Rand Paul),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등 원유 생산 주 소속 민주당 의원까지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서, 초당적인 법안 가결도 가능한 상황
 - 그러나, 수출 재개로 인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 우려 및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셰일오일·가스 개발 채산성 악화 부담이 있어 공화당은 신중하게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
 - 원유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인 국내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는 물론, 한미 FTA에 따른 원유 수입관세(3%) 철폐로 원가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길이 2,735km의 송유관 건설사업인 키스톤(Keystone XL) 프로젝트 추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
 - 이미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는 승인 법안을 7건이나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주도 상원 내 반대에 부딪혀 프로젝트는 답보 상태
 -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캐나다 업체가 캐나다 땅만을 거쳐, 원유를 아시아로 수출하는 에너지 이스트(Energy East)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자극제로 작용 예상
 - 키스톤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한국산 코일 철강 등 철강제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대북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I 중간선거 결과 요약

- 공화당 양원 장악으로 8년 만에 여소야대 재현, 오바마 레임덕 가속화 예상
 -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 IS·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에볼라 등 돌발 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주효하게 작용

< 주(state)별 중간선거 결과 ('14.11.6, 오후 3시 현재 기준) >



- 공화당이 강경책 택하면 당파적 교착 유지 우려
 - 공화당이 상원 내에서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 형성은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의 의사진행방해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돌파구 부재
 - 민주당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막을 수 있는 토론종결동의(cloture)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3/5(60석),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를 위해서는 상원의 2/3(67석)의 동의가 필요
 - ※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의회 내 소수가 통과가 확실시 되는 법안이나 정책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
 - 공화당은 상원의 인준안 승인 권한을 이용해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직 임명을 지연하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맞설 것으로 예상

II

주요 경제통상 이슈별 입법 방향 전망

- ◆ 무역촉진권한(TPA) 부활로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 급물살 기대
- ◆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선심성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
- ◆ 오바마케어 개정 및 탄소배출 감축법안 폐지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
- ◆ 원유수출재개 및 키스톤 프로젝트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 (정유업체 및 코일 철강 등 철강 수출업체) 에도 수혜 예상

무역 · 통상

□ (TPA* 부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승리로 TPA 부활에 청신호

- 공화당 상원 장악으로 오른 헤치 공화당 의원이 차기 상원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해, 올해 초 헤치 의원과 막스 바커스 前 금융위원장(現 주중 미국 대사)와 데이비드 캠프 하원 조세위원장이 발의한 ‘TPA 부활법안’ 재조명 가능

※ 초당적 의회 무역 우선사항 법(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ct)

- 무역촉진권한(TPA)을 법안 발효 이후 4년간 부활하고 다음 의회에서 3년 추가 연장 검토
- 노동, 환경, 공기업, 환율 등 미국의 자유무역협상에서의 협상목표를 제시하고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상 내용을 모든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란?

- 무역 협상 촉진을 위해 의회가 협상의 전권을 행정부에 일임하여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서, 2007년 만료 (의회는 협상 결과의 승인 여부만을 투표)

-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 및 환경 단체 등 주요지지 기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TPA 부활을 반대한 바 있지만 선거 이후 입장 선회 가능
- 그간 TPA 부활을 위해 노력해 온 공화당과 협의를 통해, 기존 TPA 부활 법안 내 포함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협상 목표 완화 가능
- TPP 비준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공화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화당 집권기에 TPP 및 TTIP(미국-EU 간) 등 굵직한 FTA 체결을 일궈낼 수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TPA 연장이 반드시 필요

□ (TPP 비준) TPA 부활되면, TPP 비준은 급물살 기대

-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최우선 통상과제로 추진해 온 TPP의 비준 가능성 제고
-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기업 단체들이 TPP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
- USTR 출신으로 현재 로펌 McDermott Will & Emery LLP 파트너인 제이 아이젠스태(Jay Eizenstat)은 ‘공화당 장악 의회와 임기 내 업적을 굳히려는 민주당 대통령은 TPA 갱신과 TPP 의회 비준을 위한 최적의 조합’으로 평가
- 다만, 미국 기업들에게 충분한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TPP 비준의 핵심 쟁점으로, 기업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협정이 체결된다면, 공화당 역시 TPP에 반대할 수 있다고 분석

□ (보호무역주의 조치) 선거용 보호무역주의 조치 기세는 수그러들 전망

-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노조 단체 등의 표심 확보를 위해 노골화됐던 보호무역조치 기세는 한풀 꺾일 전망
- 지난 8월, 미 상무부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을 뒤엎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
- 통상 전문가들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은 관련 움직임이 수그러들 것으로 관측
-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환율감독개혁법(Currency Exchange Rate Oversight Reform Act)에 대해서는 공화당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
※ 공화당 지도부(leadership)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해 동 법안에 반대
- 동 법안의 발의자인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오하이오 주 상원의원이나 법안스폰서 의원들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이 입법부를 장악할 경우 동 법안 상정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주요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던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대선을 전후해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경제현안

□ (예산안) 공화당 양원 장악으로 예산 협상에서 우위 확보

- 차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확실히 되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켄터키 주 의원은 일찌감치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다’며 ‘건강보험, 환경* 등 모든 사항을 내걸 것’이라고 엄포, 치열한 협상에 돌입할 것을 예고
※ 환경청이 추진하는 탄소배출감축안 지칭
- 예산안은 다른 법안과는 달리 소수파의 의사처리방해(filibuster)가 불가능*하고 상하원에서 단순 다수결로 통과가 가능해, 민주당 의원들의 협상력 부재
※ 예산 조정 절차에 따라 상원의 예산법안 논의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
- 오바마 대통령은 당의 도움 없이, 거부권으로 맞서야 해 부담 가중

□ (부채협상) 공화당, 작년 경험 되살려 부채한도협상에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 기대

- 내년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부채한도증액 협상과도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우려
-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예산 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전문가들은 지난 해 연방정부 셧다운의 엄청난 후폭풍을 공화당이 경험한 만큼 당시 상황의 재현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
-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무효화 또는 수정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 측간 적당한 선에서 부채한도협상이 마무리될 전망

□ (기타)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통화정책 독립성 위협 가능

- 금년 9월 공화당 주도로 연방준비제도 투명성 법안*이 통과, 상원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반대로 표결 불발
※ 발효 12개월 내 회계감사원장은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와 지역 연방준비 은행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 감사 완료 90일 이내 감사 결과 및 결론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공화당의 상원 집권 성공으로 상원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정책 결정에 의회의 개입 시도 우려

에너지 정책

□ (원유수출 재개) 40년 묵은 원유수출금지조치(EPCA) 해제 가능성 제고

- 미국 석유기업들은 40년 묵은 원유 수출 금지 조치(EPCA)를 풀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비전 개진
 - 랜드 폴(Rand Paul),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 뿐 만 아니라 알래스카,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등 원유 생산 주 소속 민주당 의원까지도 지지 의사를 밝혀, 초당적인 법안 가결도 가능한 상황
-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원유수출 재개 법안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수출 재개로 인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 우려 및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셰일 오일·가스 개발 채산성 악화 부담이 있어,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할 전망
 - 또한, 존 베이너 상원 의장, 케빈 맥카티 하원 다수당 대표, 맥코넬 상원 소수당 대표 등 공화당 지도층이 아직은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이해득실을 면밀히 파악한 후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

□ (송유관 건설) 키스톤 프로젝트* 추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길이 2,735 km 송유관 건설사업

- 이미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는 승인 법안을 7건이나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주도 상원 내 반대에 부딪혀 프로젝트는 답보 상태
 - 공화당이 상원 장악시, 동 프로젝트 승인을 일정 기간 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상정이 가능하며, 중간 선거 이후 환경 단체로부터의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민주당 의원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 합의 도출 기대
-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캐나다 업체가 캐나다 땅만을 거쳐, 원유를 아시아로 수출하는 에너지 이스트(Energy East) 프로젝트를 단독 추진하는 것도 자극제로 작용 전망
- 키스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네브래스카 주 대법원 재판 결과, 송유관 건설 청원이 기각되면 다른 주로 송유관 경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 지연이 우려
 - ※ 네브래스카주 법원은 송유관 통과를 허용한 주법을 뒤집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진행 중

대북정책

□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

- 그레그 스칼라티(Greg Scarlatou)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트로이 스타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 의회 및 무역 선임부장 등 북한 전문가 접촉 결과, 중간 선거로 인해 대북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밥 코커(Bob Corker) 공화당 의원은 메넨데즈 現 위원장과 대북 및 외교정책에 비슷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평가(오바마 행정부 초기 한반도 정책을 총괄한 프랭크 자누지, KDI 토론회(11.6))

기타 현안

□ (오바마케어)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맥코넬 의원이 예산안 협상시 오바마케어 수정안을 내걸 것으로 엄포함에 따라 차기 의회 내 논의가 거의 확실시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고, 거부권을 무효화할 만큼 공화당이 상원 내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상호 합의를 통해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의료기기 특별소비세(2.3%) 폐지는 34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어 초당적으로 가결 가능

□ (법인도치) 법인도치(corporate inversion)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 추진 가능

-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일명 본사 바뀔치기(법인도치)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방법을 두고는 이견
- 세로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과 딕 더빈(Dick Durbin)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은 출국세(exit tax)를 부과하는 법안* 발의
- ※기업이 법인세 등을 물지 않으려고 외국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한 뒤 법인 소재지를 외국으로 옮기고 나서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
- 공화당은 법인세 최고 수준을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하는 소규모 세법 개혁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채한도인상 협상시 협상카드로 활용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

III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결과 분석

◆ KOTRA의 미국 소재 8개 무역관이 관할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정계, 업계, 학계 등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와 현지 개최 설명회 참관 내용을 토대로 작성

무역 · 통상

- USIR 출신, 現 McDermott Will & Emery LLP 파트너 제이 아이젠스탯(Jay Eizenstat)
 - 공화당 장악 의회와 임기 내 업적을 굳히려는 민주당 대통령은 TPA 갱신과 TPP 의회 비준을 위한 최적의 조합 이라고 평가
- 미 상무부 무역정책 분석부 출신, 現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 켄 모나한(Ken Monahan)
 -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TPA가 갱신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한 뒤, 미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가 TPP를 원하는 만큼 기업친화적인 공화당에서는 TPP 비준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
- 빌 클린턴 행정부 입법 보좌관 출신, 아메리칸 대학교 공공행정대학 패트릭 그리핀(Patrick Griffin) 교수
 -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 상원 장악으로 TPA 부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층을 설득한다면 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 TPP와 TPA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상황이 복잡한데,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만큼, TPP 비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아울러, 한미 FTA 이행만 잘 이뤄진다면 한국의 TPP 참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
- 남가주 수출위원장 가이 팩스(Guy Fox)
 - 공화당을 지지하는 일부 산업 노조가 걸림돌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TPA 부활 및 TPP 비준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조속한 TPA 비준을 위해서는 재계의 압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TPP 비준까지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어바인 시장 특별보좌관, 한미법률재단 상임이사 해롤드 서(Harold Surh)

- 공화당 집권으로 TPP 등 FTA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부시대통령 경제고문 출신, 노스웨스턴 대학교 켈로그 비즈니스스쿨 필립 레비(Philip Levy) 교수

- 구체적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공화당은 TPA 부활에 속도를 낼 것이고 가결을 전제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력을 보일 경우 2016년 중반 이후에는 TPP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오바마 대통령은 당 내부적인 반대파 의견을 조율하여 TPA 승인을 얻어내고, 12개 참가국 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관측
-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 비준이 결렬된다 해도, 2017년 차기 정부에 의해 다시 비준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
- 참고로, 최근 발효된 FTA는 모두 공화당 주도 하원의 지지(공화당 지지율 약 90%)에 힘입어 비준 성사

□ 막스 보커스 前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 現 시장조사전문기관 에델만(Edelman)에서 국제무역 및 금융정책 부사장 셴 니어리 (Sean Neary)

- TPA 승인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발효된 FTA 또한 공화당의 적극적인 지지로 비준 성사
- TPA 승인 의미는 협상 테이블을 세팅하는 단계 이상은 없어, 사실상 프로세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걸림돌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
- TPP 비준은 2015년 후반 또는 2016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다양
- 2016년 이후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이루어 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한미경제연구소(KEI) 의회 및 무역 선임부장 트로이 스타가론(Troy Stangarone)

- 최근 접촉한 공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화당이 지난 몇 년간 TPA 부활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고려시, TPA 부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 로펌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 통상 전문 변호사

- 차기 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인 ‘Lame Duck Session’ 기간 중, 차기 의회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화당이 TPA를 부활시키려는 시도 가능
- 현재 민주당 내에도 TPA에 대한 지지자들도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레임덕 기간 동안 TPA를 부활시키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TPA를 부활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경우, 2015년 전반 ~ 후반 정도로 예상)
- TPP 협상국 입장에서는 TPA 부활 없이 협상을 완료할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고려해, TPP 협상 진척이 느려질 우려도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베이징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경제 현안

□ 빌 클린턴 행정부 입법 보좌관 출신, 아메리칸 대학교 공공행정대학 패트릭 그리핀(Patrick Griffin) 교수

- 공화당은 협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12월 11일 만료되는 2015 회계연도 결의안을 또 다른 단기 결의안으로 임시 연장함으로써, 부채한도 협상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
- 단 지난 해 연방정부 폐쇄의 역풍을 공화당이 경험한 만큼, 당시 상황의 재현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 캘리포니아주 17지구 연방하원의원 출마자 로 카나(Ro Khanna)

- 차기 의회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안과 부채한도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

□ 어바인 시장 특별보좌관, 한미법률재단 상임이사 해롤드 서(Harold Surh)

- 공방은 있겠지만, 연방정부 폐쇄 사태 재현을 막고, 미국의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되어 있어 예산안과 부채한도협상은 반드시 타결될 것으로 예상

□ 미국기업연구소(AEI) 'Election Watch 2014' 토론회* 중 경제현안 부분 요약

※ 2014.10.21./워싱턴 DC에서 '중간선거 결과와 파급효과 전망' 설명회 개최

- 맥코넬 의원이 의사처리방해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 과정 중 의료기기 특별소비세 철폐 등 오바마케어 관련 개정안, EPA의 탄소배출감축안 철폐 이슈를 둘러싸고 오바마 행정부와 마찰 예상
- 그러나, 지난 연방정부 섰다운 역풍을 경험한 공화당이 협상에 있어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양당 협력의 가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파적 합의도 가능한 상황
 - 2016년 선거가 치러지는 상원의 34개 의석 중 24개가 공화당 의원들로 채워져 있어, 이들 역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협력 무드 조성에 기여할 가능성

에너지 정책

□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 에드 로이스(Ed Royce)

- 차기 상원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키스톤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측
 - 정유산업과 건설산업의 고용창출과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 허핑턴포스트의 에너지 및 환경 담당 기자 케이트 셰퍼드(Kate Shepherd)

- 원유 수출을 재개하면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하락의 우려가 있어, 공화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으로 예상
- LNG 수출 승인 가속화는 유력

□ **맥스 보커스** 前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 現 시장조사전문기관 **에델만(Edelman)**에서 국제무역 및 금융정책 부사장 **션 니어리 (Sean Neary)**

-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 이미 공사 진행을 위한 7개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라, 상원에서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
- 원유 수출 재개와 관련하여, 상·하원이 모두 향후 수출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 공화당 주도 의회 하에서는 미 환경청(EPA)의 환경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

□ **남가주 수출위원장 가이 팩스(Guy Fox)**

- 키스톤 프로젝트는 예전에 승인되어야 했던 사안으로, 차기 의회에서 동 프로젝트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기까지는 예단이 어렵다고 판단

□ **RealClearPolitics ‘미국 에너지 정책과 중간선거’ 토론회*** 중 에너지 부분 요약

※ 2014.10.16/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 정책과 중간선거’ 설명회 개최

- 공화당 다수 의회는 키스톤 송유관 사업 승인 촉구 유력
 - 키스톤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상원의원은 현재 총 57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지지파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를 피할 수 있는 60석 이상을 확보하느냐가 관건
- 대통령과 야당의 주요지지 기반인 환경주의자와 노조의 이익이 키스톤 송유관 사업을 둘러싸고 대치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 입장을 자제하는 상황으로, 차기 의회의 다수 결정을 따라 갈 가능성이 높은 편
-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캐나다 업체가 캐나다 땅만을 거쳐, 원유를 아시아로 수출하는 에너지 이스트(Energy East)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자극제로 작용할 것

대북 정책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티우(Greg Scarlatou)

- 선거 결과로 인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샤론 켄크 실바 (Sharon Quirk-Silva)

-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

□ 한미경제연구소(KEI) 의회 및 무역 선임부장 트로이 스타가론(Troy Stangarone)

- 상황에 따라 추가 제재 법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공화당 집권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기타 현안

□ 어바인 시장 특별보좌관, 한미법률재단 상임이사 해롤드 서(Harold Surh)

- (해외소득 과세이연) 민주당 주도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것
 -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소비심리와 유동성을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을 우려
 -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고, 규제강도는 높아 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 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제수준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오바마케어 개혁) 재계는 오바마케어를 최악의 정책이자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어, 차기 의회에서는 오바마케어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 에드 로이스(Ed Royce)

- (의료기기 특별소비세) 양당에서 모두 소비세 철폐 지원 세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의회에서는 이러한 세력이 체계적으로 규합되어 본격적으로 철폐 노력을 기울일 전망

□ 미국기업연구소(AEI) 'Election Watch 2014' 토론회 중 기타현안 부분 요약

- 법인세 인하는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확대는 힘들 것
 - 현재 법인세와 관련하여 의회가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과세표준(tax base) 확대를 고려 중*
 - ※ 금년 2월 26일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세법 개혁안은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대신 몇몇 세금 우대조치를 철회하며 과세표준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통과 실패
- 노만 온스타인(Norman Ornstein) AEI 연구원은 공화당 상원 장악으로, 법인세 인하는 가능하지만 과세표준 확대는 업계 반발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관측
 -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세입 충당을 위한 세제혜택 철폐 등 오프셋(offset) 조항들은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

IV

국내업체 시사점

무역 · 통상

□ TPA 부활 및 TPP 비준 가시화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예상

-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TPP가 출범할 경우, FTA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FTA 전략에 차질 우려
- 우리 정부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현재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약』 진행 중
 - ※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12개국)과 협상 참여 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약’에 들어감을 의미할 뿐 공식적인 협상참여는 아님.
- 정부는 향후 TPP 협상 진전동향,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약’ 경과, 산업별·분야별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 예정
- TPP는 경제·무역 규모로 봤을 때, 사실상 마일 간의 FTA로 우리나라 없이 TPP가 발효되면, 미국 시장 내 한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 FTA 시장 선점 효과에 타격 우려
-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TPP 참여국에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조달을 많이 하거나, 해외 투자를 통해 간접 수출하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할 경우 역내 가치사슬을 활용 중인 우리기업에 수혜 기대
 - ※우리나라산 재료가 TPP 국가에서 어떤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를 TPP 국가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 한동안은 보호무역주의 조치 남발 기세가 수그러들 전망

-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노조 단체 등의 표심 확보를 위해 노골화됐던 보호무역 조치의 기세는 한풀 꺾이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교역환경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

경제 현안

- 예산안, 부채한도협상시 극한 대립 상황이 재현되면, 우리 기업에 악영향 우려
 - 지난해와 같은 극한 대립 상황이 재현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의 활력과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악영향 우려

에너지 정책

- 원유수출 재개시, 국내 정유업계 수혜 예상
 - 미국은 이미 지난 6월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를 원유에서 정제유로 재구분하면서 수출을 허용했으며, 한국으로는 지난 8월 원유 약 40만 배럴을 수출
 - 원유수입처 다변화를 추진 중인 국내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는 물론, 한미 FTA에 따른 원유 수입관세(3%) 철폐로 원가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키스톤 프로젝트 승인시,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에도 도움 기대
 - 미국 코넬 대학교 글로벌 노동연구소(Global Labor Institute)는 키스톤 프로젝트 건설에 한국의 철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 글로벌 노동연구소가 2011년 발간한 ‘파이프드림(Pipe Dream)’ 보고서에서도 동 프로젝트에 한국 및 인도산 코일 철강 등 전자재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대리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문진욱 과장
◆ 시카고 무역관	홍용택 과장
◆ 시카고 무역관	박상준 대리
◆ 실리콘밸리 무역관	김필성 차장
◆ 선진시장팀	이정선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4-038

美 중간선거 결과 이후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1월 6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